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85
----------	------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21. 4. 1. 시행)에 따라,
- 나.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중 용어 정비 및 불일치 수정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안 제5조 ~ 제19조)
- 나. 「화학물질관리법」 인용 조항 불일치 수정 (안 제17조 ~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2. 6. 30. ~ 2022. 7. 20.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경기도 관련부서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비상대응계획”을 “사고 대응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계획”을 각각 “사고대응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1조제3항제2호” 를 “법 제23조제3항제3호”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을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비상계획” 을 “사고대응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5항” 을 “법 제23조제8항” 으로, “위해관리계획서” 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관리계획서” 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을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환경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팀장 직위 · 성명	환경지도팀장 김효중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임나은 (790-574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 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 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 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u>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u> 과의 연 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 ----- ----- ----- ----- ----- ----- ----- <u>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u> -- -----.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u>비상대응계획</u> 의 수립과 이행	2. ----- -- <u>사고대응계획</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 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 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 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 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 치 및 기능) ----- ----- ----- ----- ----- -----.

1. (생 략)

2.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 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생 략)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4. (생 략)

제18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3. (현행과 같음)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9조에 따른 -----

3.·4.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

-----.

② 사고대응계획-----
-----.

1. ~ 7. (생략)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생략)

②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 사고대응계획-----
-----.

제19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

----- 법 제23조제3항제3호-----

-----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원장-----
-----.

1. 2. (현행과 같음)

3. 사고대응계획-----

4.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3조제8항-----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③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관계법령 발췌서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6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